

회계투명성이 경제와 무역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최 중 경

I. 글머리에: 회계정보는 왜 중요한가?

미국 남가주대학(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의 역사학자이자 회계학자인 제이콥 솔(Jacob Soll) 교수는 그의 저서 『회계는 어떻게 역사를 지배해 왔는가? (The Reckoning: Financial Accountability and the Rise and Fall of Nations)』에서 회계투명성이 기업, 나아가서는 국가의 흥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통상 회계는 복잡하고 전문가들끼리나 통하는 어려운 언어(소위 Jargon)이고 일반 국민의 생활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은 한국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가히 충격적인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태평양 전쟁의 전개양상을 보면 전쟁의 승패는 국가의 산업역량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산업역량의 측정은 회계기록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제이콥 솔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

는 것은 아니다.

태평양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일본군의 주력 전투기 제로센은 미군의 주력 전투기 버팔로와 와일드캣을 압도했지만, 전쟁기간 중 미군이 항공기 엔진을 2차례 업그레이드하여 엔진출력을 높임으로써 전투능력을 획기적으로 증강시키는 동안 일본군은 단 한차례의 엔진 업그레이드도 성공하지 못했다. 태평양 전쟁 말기의 제공권은 100% 미군의 수중에 있었고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은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자국의 산업역량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상대국의 산업역량과 비교함으로써 전쟁패배의 비극과 고난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데 일본은 그치지 못했다.

평상시에도 회계투명성은 경제 운용의 필수요소이다. 경제학원론 강의실에서 “경제학은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

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가르친다. 뒤집어 얘기하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실패하면 경제는 망한다.”이다. 그런데 자원을 배분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의사결정주체가 개인이든 기업이든 금융기관이든 정부든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는 모두 회계장부수치에 근거하고 있다. 회계정보가 잘못되면 회계정보에 입각한 모든 자원배분 의사결정이 잘못되고 경제는 성장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좋은 일자리도 충분히 만들어 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대우해양조선 분식회계 사태는 회계분식으로 인한 자원배분 왜곡과 국민혈세낭비의 문제도 크지만 산업정책측면에서 볼 때 산업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쳤다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대우해양조선의 회계처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졌다면 손실발생상황이 일찌감치 파악되었을 것이고 조선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조치가 서둘러 이루어짐으로써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보전하는데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을 것이다.

회계수치는 거시경제정책의 운용과도 관련이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매출을 모두 합산하면 GDP와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회계수치가 틀리면 GDP 통계도 신뢰성을 잃게 되고 거시경제

정책의 방향(확장정책을 쓸지 긴축정책을 쓸지)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게 된다. 회계투명성이 떨어지면 경기하강국면에서 긴축정책을 써서 경제를 나락에 빠뜨릴 수도 있고, 반대로 경기상승국면에서 확장정책을 구사해 인플레이션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다. 정부가 법인세와 소득세를 과세하는 데 있어서도 회계투명성은 중요하다. 세금산정의 출발점 역할을 하는 기초자료가 기업회계 장부상의 이익이기 때문이다. 기업회계 장부상의 이익에 세법규정에 따른 세무조정(‘손금불산입’이라는 항목으로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을 하면 과세표준이익이 산출된다.

II. 회계투명성은 어떻게 확보되나?

회계투명성은 사회전반의 투명성 수준과 함께 간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회전반의 준법정신, 도덕성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회계기준, 표준감사절차등 회계 관련 제도의 정비가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가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회계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수단은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이다. 외부감사는 회계정보 생산을 담당하지 않은 외부의 회계전문가인 공인회계사가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능이기 때문이다. 외부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사

회전반의 투명성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도 회계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다. 60년대, 70년대에 사회전반의 투명성이 낮은 상황에서 정부가 외부감사인을 기업에 할당하는 지정방식의 외부감사제도가 실시된 배경이다.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제도는 서구자본주의에서 이식된 제도여서 우리나라는 외부감사의 필요성과 기능에 대한 인식수준이 서구사회보다 현저히 떨어진다. 1980년에 도입된 외부감사인 자유선임제도가 좋은 예이다. 주식이 분산되어 있고 전문경영인 체제가 정립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CEO를 선임하고 CEO를 감독하게 되는데, 이사회 구성원들의 회계전문지식이 부족하니까 공인회계사를 고용해서 CEO가 작성하여 제출한 재무보고서를 감사하게 한다. 따라서 이사회가 고용한 공인회계사는 CEO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회계감사를 실시하므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다.

그런데 1980년의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는 오너가족에 의한 이사회가 구성되고 CEO도 대부분 오너가족의 일원이 담당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이사회에서 공인회계사를 고용한다 해도 CEO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엄연히 존재하였다.

미국과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차이를 무시한 채 도입한 외부감사인 자유선임제도는 한국의 회계투명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고, 2016, 2017년 연속해서 IMD가 평가한 회계투명성 순위에서 세계 꼴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다. 기업지배구조상 이사회와 CEO가 한 몸이 되면 이사회가 선정한 공인회계사는 마치 「피고가 자신을 수사할 검사를 마음대로 고르는 양상」이 되어 회계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부실감사한 회계사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는 마치 크게 잘못된 범죄발생환경은 방치한 채 형량만 늘리면 범죄가 예방된다는 황당한 논리와 큰 차이가 없다. 2017년 현재의 기업지배구조도 1980년과 비교하여 볼 때 거의 비슷한 수준이므로 외부감사인 자유선임제도를 손질하여 지정방식으로 회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규모 분식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대우조선해양의 경우도 결국 외부감사인인 공인회계사들이 독립적 지위에서 감사를 제대로 진행시키지 못한데 근본원인이 있다. IMD입장에서 보면 회계투명성 확보의 가장 유효한 수단인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가 허약한(을)의 지위에 머무르며 절대(갑)인 기업CFO로부터 감사의견을

형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료를 제대로 징구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낙후된 기업지배구조에 맞추어 외부감사인 선임제도를 지정방식으로 바꾸지 않는 한 IMD 회계투명성 순위 세계꼴찌의 불명예를 벗어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그 동안 이렇게 잘못된 제도가 버젓이 존재한 이유는 서구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와 함께 외부감사의 공공재적 성격을 애써 외면하며 외부감사제도를 기업규제 차원에서 다룬 철학 빈곤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감사대상기업 중 숨길 것이 많은 불량 기업들의 역선택도 한 몫 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제대로 된 기업 주라면 공인회계사 외부감사를 내부 부정이나 오류를 찾는 데 적극 활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닌가?

III. 회계투명성과 Korea Discount

IMD 회계투명성 순위 세계 꼴찌는 어떤 대접을 받게 될까? 우선 세계적인 규모의 계약입찰에 참여했을 때 여러 가지 불이익에 직면하게 된다. 제출한 재무보고서의 신뢰도를 의심받게 되므로 까다로운 이행보증을 요구하는 등 부가조건이 추가되거

나, 아예 Short-List에서 배제될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이 발행한 주식, 채권의 평가도 제 값을 반영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제품도 제 값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회계투명성이 낮으면 국내적으로는 자원배분이 엉터리로 되어 생산성이 낮아지고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며 일자리 창출도 어려워지면서 국제적으로는 Korea Discount의 빌미가 되어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성과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회계투명성을 높여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서구사회는 일찍부터 회계교육을 넓게 실시하고 회계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왔다. 특히 네덜란드는 작은 나라였지만 해외에 넓은 식민지를 보유하고 유럽에서도 독립국가의 지위를 확보하며 크게 번영하였는데, 그 배경 중 하나가 회계교육을 통해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사회를 구축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제이콥 솔(Jacob Soll) 교수는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선진 국가로서 번영을 누리고 국제적인 신인도를 높여 제대로 된 대접을 받으려면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면 안되고 사회전반의 회계학 교육수준을 높이고 보다 대중화할 필요가 있다.

제이콥 솔(Jacob Soll) 교수는 스페인이 남미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도 유럽의 중위권 국가에 머물고 있는 이유로 스페인이 회계교육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날에도 국제사회에서 강소국인 네덜란드의 활약이 돋보이는 이유도 결국 회계교육을 통해 잘 훈련된 국민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Korea Discount를 없애는 길은 긍정적인 측면에 한국을 홍보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Dynamic Korea’나 ‘Soul of Asia’나 목소리 높여 보아야 회계투명성 세계꿀찌임이 알려지는 순간 우리 국민과 기업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지고, 어떤 형태의 국제협력도 제대로 된 파트너를 만나길 기대하기 어려워진다는 현실을 위정자들이 직시해야 한다.

IV. 통상마찰과 회계투명성

무역 분쟁 중 선진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행사하는 긴급조치로서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y)와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가 있다. 반덤핑관세는 수출축진을 위해 정상가격보다 낮게 수출판매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고, 상계관세는 WTO(세계무역기구)에서 금지하고 있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입품

에 대해 보조금을 받은 만큼 추가관세를 부과하여 불공정경쟁을 막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었을 경우 부과취소를 위해서는 수출판매가격이 정상판매가격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투명하게 작성된 원가계산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무리 완벽한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하더라도 회계투명성이 세계꿀찌라는 낙인이 찍혀 있는 한 제출되는 원가계산자료의 신빙성은 크게 의심받게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자격증을 가진 회계사가 작성한 자료의 증거능력이 약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외국 자격증을 가진 회계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상계관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 경우에는 원가계산자료와 함께 보조금이 특정기업이나 특정산업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을 해야 하는데 보다 방대한 회계자료를 분석해야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조세회피 방지나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국제협정들을 준수하는 과정에서도 회계기준의 정합성과 함께 회계정보의 투명성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기 때문에 회계투명성을 제고하여 불필요한 분쟁이나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어야 하는 또 다른 당위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V. 회계서비스 시장 개방

우리나라의 회계서비스 시장은 미국, EU 등 선진경제와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에 의해 단계적으로 개방되고 있다. 우리 회계산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위 Big-4라고 지칭되는 국제적인 회계법인(PWC, KPMG, Deloitte, E&Y)과 제휴관계에 있는 대형회계법인들이 오래전부터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회계서비스 시장은 FTA 이전에도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개방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외국의 우수 회계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제휴된 한국회계법인으로부터 브랜드 로열티를 받는 것이 안전한 비즈니스 모델이어서 현재의 상황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회계서비스 시장 개방에 있어 앞으로의 쟁점은 외국의 회계사 자격을 자동적으로 국내 회계사 자격과 동일하게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 그리고 외국회계법인이 51% 이상 출자하는 국내회계법인을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언어장벽 문제와 회계감사 서비스가 갖고 있는 업무리스크(부실감사에 대한 형벌과 손해배상), 그리고 Big-4

의 국내진출 상황을 감안할 때 추가쟁점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시간도 꽤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우리말이 자유로운 외국 자격을 소지한 교포회계사나 외국자격을 취득한 한국인들이 국내에서 개업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VI. 맺음말: 회계와 법률 그리고 일자리

회계 자체는 법률체계의 일부라고 하기 어렵지만 법률의 이행과 적용 과정에서 법정신을 보다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다. 통상분야에서 무역마찰, 국제조세 분야와 관련한 분쟁의 해결과정에서 회계의 역할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렇기에 회계와 관련된 국제적 흐름을 파악하고 필요한 전문지식으로 무장된 유능한 회계사를 평소에 충분히 양성해 두는 것이 개별기업과 산업 나아가 국가경제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길이다.

회계투명성은 국가의 격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이기도 하다.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에 모두 나서야 한다. 일자리 일자리 하고 있는데 필자의 직관으로 판단할 때

회계투명성을 높이면 잠재 경제성장률이 2%p 올라가고 매년 일자리 10만개씩 늘릴 수 있다고 본다.

기술발전 수준으로 보나, 사회의 성숙도로 보나, 가사노동의 시장화 정도로 보나 선진국과의 격차가 큰 현실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Catch-up할 공간이 크다는 뜻이므로

성장의 속도가 빨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성장률이 선진경제 수준인 2%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의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7~8% 성장하는 중국 경제와 2% 성장하는 선진 경제와의 중간 어디에서 우리 경제성장률이 위치하고 있어야 정상이다.